



코앞으로 다가온 수능

2026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흘 남은 3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외벽에 수능 디데이가 게시되어 있다. /뉴시스

농식품부 이전론 ‘꿈틀’

정부조직개편

호남 중심 농식품부 이전설 확산
국토부,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검토

해양수산부가 연내에 부산으로 이전한다. 해수부가 떠난 자리엔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기획예산처가 등지를 틀 예정이다. 이같이 부처 사무실 이사 준비가 한창인 와중에, 농림축산식품부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등장해 관심을 끈다. 내년 실시되는 6·3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둔 시점이다.

지난 9월 7일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 및 대통령실 의중에 따라 해수부는 내년 초 또는 올해 말 부산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빈자리엔 기재부에서 갈라져 나올 예산처가 들어서게 된다.

그런데 해수부 부산이전과 맞물려 ‘결다리’ 수준에서 나돌던 ‘농식품부 이전설’이 호남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 앞서 ‘왜 농식품부는 전주인가’라며 산하 기관들이 자리한 나주로 내려가는 게 맞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전남도의회의는 지난달 하순 ‘농업회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

안은 지방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농식품부 청사의 전남지역 이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전남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식품공무원교육원 등 농정 핵심기관들이 집적돼 있음에도, 정책 사령탑인 농식품부는 여전히 세종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한 본격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연말까지 수도권 공공기관 157곳을 대상으로 이전에 대한 의향을 물을 계획이다. 이어 내년 1분기에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안을 공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문제는 선거다. 다음 지방선거가 내년 2분기에 실시된다. 지방 이전 범주가 정부 부처까지 확대될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만은 없다.

더욱이 이재명 정부는 이른바 ‘5극3특’이라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 중이다. 5극3특이란 수도권 일극 체제를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특별자치도(전북·제주·강원) 3곳 체제로 바꿔 지방균형발전을 꾀하는 게 골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입법 속도 통화정책 혼드는 ‘날림’ 우려도

가상자산 선진화

與野, 관련 법안 필요성 공감
법적 지위·발행 요건 등 견해차
국회 일정 촉박… 쟁점검토 한계

정부와 국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확립 등 가상자산의 제도화를 위한 법안 마련을 서두르면서 주요한 입법 쟁점에도 관심이 모인다.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와 발행요건에 대한 견해차가 지속되는 한편, 정치권이 관련 입법을 서두르면서 ‘날림 입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3일 국회입법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에서 심사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총 8건이다. 민주당이 4건, 국민의힘이 4건을 발의했다. 4개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기본법, 나머지 4건은 ‘스테이블코인’의 지위와 발행요건을 규율하는 내용이다. 법안의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관련한 법안의 필요성에는 여·야 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

정부도 가상자산의 제도화를 위한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덕원 금융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를 제시하고,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와 상품의 규제를 명확히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입법 목표는 올해 말이다.

정치권에서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의 제도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어서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23년 가상자산 시장을 아우르는 ‘MiCA(암호자산시장법)’를 마련했고, 미국도 지난 7월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확립했다. 일본과 홍콩도 올해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 반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 및 과세 체계’ 세미나가 진행됐다. (앞줄 왼쪽부터)이강현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 의소 회장, 이근주 한국핀테크협회 회장,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에서는 관련 법안이 부재해 규제 불확실성이 시장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

한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에도 사후 규제로 가상자산 시장이 큰 타격을 받았던 만큼, 구체적인 규제안 없이는 관련 업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국제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입법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기본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주요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실물자산과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으로, 발행 시 통화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되는 만큼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은행 중심의 신중한 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중심의 발행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산업 경쟁력을 위해 법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회에 발의된 법안 간에도 발행 주체의

자체적 이자지급 허용 여부, 발행을 위한 자본금·담보 요건, 발행 허용 업종 등에서 이견이 있다.

정치권에서 논의를 서두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촉박한 입법 일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통상적으로 제출된 법안이 효력을 갖기 위해 반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를 과도하게 앞당긴다면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마련한 정부안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선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올해 국회 정기회의는 오는 12월 9일 폐회 예정으로, 금융위가 입법 초안을 당초 예정대로 국회에 전달하더라도 국회가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달이 채 되지 않는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국제 표준에 맞는 규율 체계가 조속히 마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확산을 가질 수 있도록 향후 정책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면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되, 사후 규제 가능성 등을 최소화한 완성도 높은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가자, 죽변항! 먹자, 수산물!

2025 죽변항 수산물축제

2025. 11. 7.(금) - 11. 9.(일) 울진군 죽변면 죽변항 일원 개막식 : 2025. 11. 8.(토)

맨손활어잡기

수산물해체쇼

어선퍼레이드

이찬원

황윤성

개막축하공연

※ 개막식 일정 및 축제 세부 일정은 추후 공개됩니다.
주최·주관 울진군축제발전위원회
후원 울진군
한수원(주) 한울원자력본부
울진죽변수협